

## 총체적인 지역 붕괴를 초래하는 에너지 정책에 맞서고 있는 지역과 사람들 -삶의 지역화를 통한 사회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

박혜령(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위원회, 탈핵신문 공동대표)

### 0. 들어가며

길지 않은 시간동안 지역의 에너지문제를 현장에서 고민하면서, 전 사회적인 체제전환의 전망 혹은 활동이 없는 탈핵,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적 변화와 제도의 개선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사고가 일본 사회를 비롯한 전 세계 자본의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응은 에너지전환의 전망과 나아가 사회 전반의 생태적 전환을 위해 좀 더 활발한 공론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 체제내에서 핵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문제를 풀어 가는 것이 갖고 있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의 내용이 비록 작은 성과들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획득해 나가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 특히 현재 지역에서의 에너지 패러다임은 공간적, 시대적 불평등의 문제를 안고 있고 일방적인 수용을 강제당하고 있지만,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하고 구조적인 요인의 작용으로 외곡되어 변질되거나 용인되고 있다.

또한 중앙 집중식 에너지 수급에서 분산화, 지역화로 바꾸어 가는 과정들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변질되고 외곡되는지를 짚어보며 앞으로 개선할 방향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한다.

### 1. ‘전원개발촉진법’으로 총화된 중앙 집중의 에너지 결정권 독점

에너지 전환과 지역화를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소도시에 에너지 결정권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앙 집중의 에너지 수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1978년 제정된 ‘전원개발촉진법’은 에너지 특히 전력의 생산과 수급의 방식을 일방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독점하는 법적인 장치이다. 한수원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핵발전소를 비롯한 발전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토호세력과 결탁이 전제된다면 훨씬 빠른 속도로 이루어질 수 있고, 소수의 이득을 위해 다수의 정의로운 에너지를 선택할 권리는 합법적으로 박탈되고 있다. 또, 한전은 전기시설 부지가 필요하면 땅 주인의 동의 없이도 강제수용이 가능하다. 협의 과정을 거친다는 조항이 있지만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공사를 강행해도 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에너지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정 지역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손해를 강요하고 있고, 이러한 부당한 사회적 불평등이 제도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앙집중식 에너지 수급 방식에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화, 분산화하기 위해서는 결정권을 분산하기 위한 기존 ‘전원개발촉진법’의 폐지와 함께 에너지 수급 방식의 국민적 동의와 논의 절차를 강화하고 필수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 2. 정부 주도의 녹색성장이 만들어 가고 있는 외곽된 지역의 에너지 자립화

대표적인 예로 정부가 핵발전·화력 등 중앙공급식 전력을 대체할 대체에너지를 개발·활용한다는 목표 아래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이 있다. 녹색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시작되었다. 각 부처들은 경쟁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정책들을 입안 추진했고, 에너지 자립마을로 일컬어지는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사업도 이때부터 계획됐다. 정부는 또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서 농촌과 소도시를 중심으로 유형별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600개의

녹색마을 조성을 목표로 세웠지만 4개 부처에서 주관하던 녹색마을 사업을 정리하고 올해부터는 환경부에서만 담당토록 하고 있으며 규모도 크게 줄어들었다.

중앙 집중식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건설과 녹색성장을 표방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이 동시에 한 지역에서 난립하고 있고, 에너지 분산과 지역화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을 재편시키고 갈등을 야기하는 문제를 낳고 있다. 더구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에너지 지역화와 자립의 전망이 없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지는 정부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전락한 것은 에너지 지역화를 위한 정책에 전면적인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 3. 사회 전반의 지역화와 삶의 지역화와 함께 에너지 분산과 지역화를 모색하자

대규모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은 대부분 농업지역으로 현재 지리적, 사회구조적으로 취약자의 위치라고 볼 수 있다. 농업시장의 개방으로 농업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는 위기는 농민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폭시키고 있고, 산업화와 자본화의 과정은 이러한 불안과 불만의 증폭에도 농민들의 존재기반을 보호할 조직적 장치마저 붕괴하는 결과를 낳았다. 핵발전을 비롯한 대규모 발전시설은 이러한 지역의 사회 붕괴의 과정에서 더 용이하게 지역에 수용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개선의 방안 없이 현재의 에너지 공급방식의 변화와 에너지의 지역화만을 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갖고 있고 변화의 단초조차 획득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의 식량 자급율은 25%에 불과하며, 그나마 쌀을 제외하면 5% 대로 떨어진 다. 나머지 먹거리는 600마일 떨어진 중국, 12,726마일 떨어진 칠레, 6,000마일 떨어진 미국, 5,200마일 떨어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서 들어온다. 이 먹거리의 수송에는 당연히 막대한 석유가 소비되고 불필요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대부분의 먹거리 생산에 석유자원을 기반한 농약과 비료 등의 화학적 투입재의

사용으로 대량생산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석유를 먹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석유 없이는 먹거리의 확보도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고갈될 석유와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막대한 석유소비량을 충당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전 세계의 많은 지역공동체들은 석유자원에 기반한 현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에서 독립한 삶을 모색하고 있다. 잉글랜드 남서부 데번의 작은 마을 토트네스(Totnes)에서는 석유 시대 이후의 지역공동체와 사람들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모색하고, 석유 없는 세상을 살아나갈 방안을 설계하며 준비하는 움직임이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전환운동(Transition Movement)이다.

2006년 나이지리아 수도 라고스에서 송유관이 폭발해 260여 명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한다. 세계에서 열 번째로 석유가 많은 나라의 국민이 석유를 흠치다 송유관이 폭발한 사건이다. 나이지리아 인권운동가 켄 사로 위와의 처형이 있었다. 켄 사로 위와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로얄 더치 쉘의 석유 개발에 맞서 싸운 사람이다. 석유채굴 과정에서 오고니족의 농경지와 숲,강을 기름으로 오염시키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긴 석유개발 회사 로얄 더치 쉘은 건재하고 켄 사로 위와는 처형당했으며 생존의 터를 빼앗긴 주민들은 목숨을 걸고 석유를 흠치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불평등을 낳고 있고, 누군가의 목숨을 담보로 개발되고 공급된다는 현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 대규모 발전시설을 위한 원료생산과 보급의 과정은 일상적이고 국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생존을 위협하는 부당함을 초래해왔다.

부분적인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변화가 과연 우리가 바라는 에너지의 전환을 가능케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로컬화, 지역화의 가치가 에너지의 전환의제에서 우리를 힘겨운 진일보를 가능케 하리라 기대해 본다.

로컬은 국가마다, 집단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지역 생산-지역 소비’에 방점을 찍는 경우도 있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를 강조하거나 지역성과 공동체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경우도 있다. 모든 의미를 포함하여 로컬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는 것에서 출발하며 이것은 지역주민

들이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한다.

#### 4.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미래 에너지를 위한 우리의 선택

석유 1배럴을 새로 발견하는 동안 4배럴을 소비하는 모순의 세계.

석유 최대 생산국에서는 흠친 석유로 암시장에서 석유0.5리터에 노동자임금의 2 주치에 해당하는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생산된 석유는 외국 석유기업이 독점하고 자국민은 만성적인 에너지 빈곤에 처하는 상황. 자원의 개발과 소비과정에서의 국가 간 불평등과 갈등은 한 국가 안에서도 발생한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사용하는 엄청난 양의 전기를 충당하기 위해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동해안과 서해안에서 송전탑을 거쳐 공급된다.

정부는 핵발전소가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말하면서도 대도시에 건설하지 않는다. 인구가 적고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건설해 정부의 부담을 줄이고 있다. 고리와 월성, 영광과 같은 핵발전소 보유지역은 사고의 위험성에 온배수의 피해까지 고스란히 그 지역이 감당하고 있다. 전기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의 계획은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더 가중시킬 것이 불보듯 뻔하다. 당장 밀양, 청도, 울진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송전탑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권력을 동원해 무리하게 주민들의 요구를 막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지는 완강하다.

에너지, 전기의 생산과 소비에 이르는 공간적, 시대적 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는 것은 생산과 소비의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관계 맺는 데서 출발한다. 즉 에너지의 지역화, 분산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문제이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고 사용할 에너지는 환경을 파괴하지 않아야 하며, 전 지구 어디서도 공평하게 나눠 써야 한다.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익을 누림과 함께 생산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지역화의 가치가 제도와 정책으로 구체화되어 생산과 소비가 나뉘어 지지 않고 일체화되는 과정을 통해, 에너지의 불평등 구조가 개선

되고 나아가 궁극적인 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모색하기를 희망한다.